

데스크사자



채희중 정치·사회 담당 편집국장

요즘처럼 정치가 사람들의 관심 한 가운데로 들어온 적이 있었나 싶다. 한때 정치 얘기는 금기였고,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치부됐다. 그만큼 정치가 우리에게 불편하기만 한 그 무엇이었다. 그런 정치가 유튜브와 SNS 등 언론 환경의 변화를 틈타 급기야 안방까지 차지하고 말았다.

최근 은오프라인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단연 '제3지대'와 '기호 3번'이다. 4월 10일 총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국내 정치와 정당, 정치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당을 창당한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은 제3당, 즉 '기호 3번'을 차지하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대안 정당 이미지 선점에 쟁탈전

총선에서 기호 순서에 따른 프리미엄 효과는 여러차례 선거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그 어떤 선거에서든 여야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있기 마련이고, 이들은 자신들의 표가 사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기호 3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 수에 따라 배정된 투표용지 순번인 기호 1번 민주당, 기호 2번 국민의힘, 그다음인 '기호 3번'을 선점하는 것은 근소 정당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나 후보를 내세우는 것보다 확실한 선거운동인 셈이다.

은펜칼럼



강대석 시인

올해 들어 남북 관계가 적대적 긴장관계 속에서 대립이 격화되며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서해상에 해안포 수 백발을 발포했고 이에 맞서 우리 군도 맞대응을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제1적 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하고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란 단어를 헌법에서 삭제토록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9·19 남북합의서 파기를 선언한 후 불과 두 달 만에 7·4 남북공동성명까지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52년 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면 1972년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과의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보수정부는 진보정부는 모두 전쟁 역제를 위해 평화공존을 남북대화의 기본 정책으로 이어왔다. 군부 정권인 전두환정부에서도 1984년 남한의 수해 때 북한이 구호물자 제공을 제의하자 호응을 보여 주었고 이를 계

기고



이중섭 소설가

아내가 돌아왔다. 밤 열두 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베트남 다낭 여행을 간 지 나흘만이었다. 아내는 여행도 좋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라며 환하게 웃었다. 아내가 없는 동안 여러 일이 일어났다. 가게 형광등 교체, 재고와 주문서 정리 그리고 변동 가격으로 조정했다. 아침저녁으로 정신발달 장애인 딸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나이 때문인지 몸과 정신이 함께 느려지면서 체력이 달리고 시간에 쫓겼다. 그런 중에 시골 친구가 다른 세상으로 떠났다.

식사 중에도 아내는 계속 여행 이야기를 했다. “다낭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 나중에 아들과 같이 다녀와요. 다린이는 내가 볼 테니까. 근데 그 시골 친구는 왜 그런 거야?” 죽은 친구는 시골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다녔다. 날씨가 엄청 추운 날에 술 한잔 마시고 사무실 소파에서 자다가 일이 벌어졌다. 심한 추위에 오래된 석유 난로를 피웠다. 밀폐된 사무실에 환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질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제 예수를 갖겠

누가 ‘넘버 3’(기호 3번)가 될 상인가?

현 상태에서 4·10 총선 기호 3번은 현역 의원 6명을 보유한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기호 3번 유지를 위해 ‘꼼수’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비례의원 사퇴를 강행했다.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가결됐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 의석을 승계하기 위한 편법이 있었다. 사실 이번 비례의원 사퇴는 정의당만의 꼼수를 넘어 기호 1, 2번 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이다. 양당은 걸고러온 제3지대 신당보다는 정의당이 기호 3번으로 남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3지대 신당들도 대안정당의 이미지와 선거 활동의 효율성 때문에 기호 ‘3’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30일 현재 제3지대 세력은 크게 세 갈래이다. 먼저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회의당이 통합할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이원욱·조승천·김종민 의원의 ‘미래대연합’이 합당할 ‘개혁미래당’, 마지막으로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이 있다. 판세는 이준석 ‘개혁신당’과 이낙연 ‘개혁미래당’의 양자 구도로 좁혀졌다.

하지만 이들 제3지대가 현역 의원 7명을 보유한 ‘넘버 3’가 되기는 쉽지 않을 듯 싶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최대한 경선을 붙여 현역의 이탈을 막는다는 계산이다. 경선 탈락 후보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역 중 컷오프 명단에 오른 대상자들 가운데 제3지대로 향하는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개혁미래당을 선택하는 현역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지역 민심은 대선 실패 이

후 최소한 민주당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 현역 의원의 탈당은 곧 정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최고, 최대 목표는 누가 뭐래도 ‘금배지’이다.

공천 결과가 설혹 불공정하고 억울하더라도 ‘단일 대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이낙연 신당을 택하기는 어렵다. 영향력 있는 현역이나 중진들의 경우 컷오프가 되더라도 민심을 거스르기 보다는 4년 뒤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탈당후 후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신당을 택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며 소속당을 비판하면서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목과도 일맥상통한다.

제3지대, 현역 이탈 적어 쉽지 않아

제3지대가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서는 이준석 개혁신당과 이낙연 개혁미래당이 통합, 양측의 현역의원 4명에 추가로 현역 3명을 영입해야 한다. 그러나 양측은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관의 공통점이 전혀 없어 화합적 결합을 이루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껏 싸우던 사람들이 오직 ‘금배지’라는 공동 목표 아래 모인 것에 지나지 않다면 아무리 거대 양당이 실망한 유권자일지라도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합당에 소극적인 이유이다.

또다른 변수도 있다. 만일 선거제가 준연동형으로 유지되면,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어 기호 3, 4번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이낙연 개혁미래당과 이준석 개혁신당이 넘버 3가 되느냐, 3류 당으로 전락하느냐 갈림길에서 있다. 이번 총선은 이래저래 불거리가 많다.

평화의 봄을 기다리며

기로 1985년 9월 서울과 평양 간 고향방문단 행사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노태우 정부도 첫 국토통일원 장관에 중도 성향의 이흥구 교수를 임명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1991 세계각국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등 남북 대화를 적극 추진했다. 다음 김영삼 정부도 남북 대화를 활발히 이어가며 자주와 평화, 민주를 통일 원칙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군부정권과 김영삼 정부에서 남북 대화가 적극 추진된 것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6·25를 겪고 월남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세대로서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들이었기에 그러했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소 지론이었던 햇볕정책을 추진하며 화해와 협력을 목표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했다. 2000년 6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통일 원칙을 선언하며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등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닦는데 주력했다. 물론 보수층의 퍼주기 논란도 적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도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역사상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평화번영정책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켰다. 한편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6자 회담(남·북·미·중·일·러)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펴 한반도 비핵화

에 노력했다.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는 상상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남북 대화를 통해 두 차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졌고 박근혜 정부도 통일 대박을 주장하며 두 번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자 강경적으로 전환하며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등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다.

극도로 경직되었던 남북 관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으로 풀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임기 중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9·19 선언을 하는 등 사그라진 평화통일의 꿈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때는 우리 생애에 통일을 볼 수도 있겠다는 기대와 안 되어도 전쟁의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상황은 반전되었다.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짜 평화 쇼’라 말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북한의 도발은 더욱 거세지고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이제는 언제 맞짱을 떠도 이상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 국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우려하고 있다.

러-우 전쟁, 아-하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도 평화가 경제이고 곧 민생임을 깨닫지 못하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 이제라도 정부는 남북화해의 길을 모색하여 긴장을 완화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한반도에 한랭전선이 걷히고 평화의 봄이 오길 기대한다.

친구의 애도사를 예약받다

다. 누적인 피곤 때문에 식사하면서 눈꺼풀이 무거웠다. 죽은 친구의 장례식장에서의 여파가 여전히 몸과 마음을 짓눌렀다.

“새로 들어온 물건 정리하느라 엄청 바쁜데 국악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 애도사 좀 준비하라고.”

조금 망설였다. 사실 애도사는 몇 글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집중해야 하는데 그때 몸과 정신이 너무 산만했다. 가장 주저한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 그러자고 했다. 저녁 7시에 만나자며 통화를 마쳤다. 겨우겨우 한 장의 애도사를 썼다.

장례식장에는 친구들이 한 삼십 명 와 있었다. 조문객들이 조금 한가할 시간에 영정 앞에 상주들과 친구들이 빙 둘러섰다. 진행에 따라 내가 맨 처음 애도사를 읽었다. 다들 침울했다. 읽는 나도 먹먹했다. 다음으로 국악인 친구가 준비해 온 요령을 흔들며 처음으로 앞소리를 메겼다.

“가요 가요, 나는 가요. 친구들 두고, 나는 가요.” 빙 둘러선 친구들이 낯고 조용하게 이어받았다. “어화 너어- 어화 너어-”, 어머니 남자- 어화 너엄-” 상여가 나갈 때 상여꾼들이 하는 뒷소리다. 상여소리에 주위 조문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상을 찍기 시작했다. 국악인 친구가 요령을 흔들며 계속해서 앞소리를 메겼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우리 친구 복기야! 너도 가고 우리도 간다. 어화 너엄.” “어화 너어- 어화 너어-, 어머니 남자- 어화 너엄-”

애도식을 마치자, 판상제인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가 왜 친구들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겠더라 주역거렸다. 진행하던 친구가 오더니 조용히 소곤거렸다.

“아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뻔했네.”

다들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다. 쌀쌀한 밤하늘에 조급씩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술을 깨려 기지개를 켜는 데 한 친구가 다가왔다. 술을 많이 마셨는지 얼굴이 붉었다. 이제 우리 나이에 젊은 얼굴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친구, 고맙네. 자네 애도사 때문에 죽은 친구가 고마워할 거네. 근데...”

“근데?”

“나중에 나도 죽으면 멋진 애도사 좀 써 주소!”

나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하며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는 결연쩍은 시썸, 웃으며 담배 한 모금을 연기로 날려 보냈다.

“암마! 앞으로 잘 살 생각이나 해! 내가 이럴 거 같아서 애도사를 안 쓰려고 했어!”

가장 우려하던 일이었다. 주저한 이유가 애도사를 예약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앞으로 애도사를 전담해야 하나? 하는 부담감마저 들었다.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니 아내가 막 웃었다.

“친구들 애도사 다 써주고 맨 나중에 죽으면 되겠네. 가장 오래 사니 좋잖아?”

나는 멍하니 아내를 쳐다봤다. 아내의 얼굴에는 아직도 여행의 즐거움이 생글생글 피어나고 있었다.

社說

길 열린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적극 나서야’

오랜 기간 담보 상태에 놓였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의 길이 열렸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사업은 KTX 송정역세권을 개발하려는 광주시나 전기차용 타이어 생산 등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금호타이어 모두에게 숙원사업이었지만 지금까지 난항을 겪어왔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광주시는 공업단지인 금호타이어 부지를 직접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도 자유롭게 설정해 해당 부지의 사업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율권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특혜 의혹이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갖추고 있다.

금호타이어 이전은 광주시가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확실한 공장 이전 증명만 있다면 공장 폐쇄 이전이라도 협상절차에 들어가는 등 유연하게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매입을 검토하던 투자회사가 포기 의사 밝힌 이후 더 이상 매입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전 사업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350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올해 영업이익도 10% 이상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점도 부지 이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중국 자본인 금호타이어가 막대한 공장 매각 자금만 챙기고 신규투자 등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금호타이어의 지가 중요하다. 금호타이어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매수 희망자만 나온다면 이전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주시 역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광주전남 가계부채, 비은행권 의존 높아 위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정책적으로 대출을 늘리면서 늘었다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의 가계부채는 소득대비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많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좋지 않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광주가 46조 원, 전남이 41조 6000억 원이었다. 문제는 광주의 경우 지역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1.7%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지역내 소득보다 빚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될 경우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다. 통상 가계부채의 적정 수준을 소득 대비 85% 정도로 보는데 광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넘는 데다 수도권(91.9%)은 물론 5대 광역시 평균(92.5%)보다 훨씬 높다는 데 심각한 점이 있다.

제1 금융권인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이나 세마을금융, 신협 등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자가 비싼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광주가 26.4%로 5대 광역시 평균보다 4.4%p 높고 전남은 전체 대출의 절반에 가까운 45.2%가 비은행권 대출이다. 지역민들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소득이 낮아 대출 금리도 낮기 때문이다.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에 은행보다 대면 영업을 중시하는 비은행권 점포가 많은 것도 원인이다.

소득이 낮아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열악한 금융 인프라로 인해 지역민들이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 큰 문제다. 자치단체들은 은행권에만 맡기지 말고 금융 인프라 개선에 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금융권도 고금리 유지시 피해가 큰 취약 차주를 위한 연체율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無等鼓

바이흐로 ‘공천’의 시간이 다가왔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입후보자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공천은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인데, 벌써 정치권에서는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은 항상 공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그래서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도 ‘시스템 공천’과 ‘개혁 공천’을 공언하고 있다. 시스템 공천은 공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법률이

출신 용산 대통령실 참모인 일명 ‘검수저’들이 출마하면서 당내에서는 ‘용산 핵심 참모는 양지, 비운은 험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후보 공천을 위한 예비 후보 컷오프(공천 배제)를 앞두고 시스템 공천·개혁공천 실행 여부가 관심이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는 이미 계파 간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한다. 비명(비 이재명)계와의 갈등에 이어 친명계 인사들이 친문(친 문재인)계 현역 의원

공천(公薦)

나 당헌·당규를 근거로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천하는 방식이다. 정치권의 고질적인

들의 지역구에 앞다뒤편을 앞세워 ‘자객 출마’하면서 ‘친명 대 친문’ 경이 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이 시작되면서 당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공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사천’ 논란과 함께 경쟁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등 협치에는 비윤(비 윤석열)계 인사들이, 텃밭인 영남 등지에는 검사

었다. 이재명 대표가 연신 강조해온 ‘당내 통합’이 공천을 놓고 더 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을 지켜보는 이이다.

무엇보다 공천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계파를 떠나 당헌·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으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시스템 공천과 개혁 공천이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cki@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contact information.